

# 동북아 균형자론과 북핵 시나리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I. 서론

- 2002년 10월에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노무현 정부 최대의 안보 사안으로 등장하여 현재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중단을 선언하였고, 뒤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외무성 비망록, 3월 31일에는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음.
  - 더 나아가 북한은 최근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단행하고 사용 후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위기 국면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 실시나 미사일발사 등과 같은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북핵 위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최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6월중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함북 길주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가 인내심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3차 6자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 안에 추가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미 행정부 내의 분위기가 강경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위 '6월 시한설'을 염두에 둘 때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임.
  
- 핵 문제와 병행하여 최근 참여정부가 천명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내외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특히 균형자론이 한미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하게 동맹의 균열상을 노정하여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동북아 균형자 개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 향후 북핵 6자회담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역할을 조망하고자 함.

## II. '동북아 균형자론'의 개요와 평가

###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내용

- 동북아 균형자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실현을 위해 한국이 외교안보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역할을 천명한 전략적 비전임.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함. 한·중·일 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인구의 23.6%, 세계무역의 15.2%, 세계외환 보유고의 38.1%, 세계 GDP의 20.9%로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역동적인 지역이 되고 있음.
  - 한반도와 중국,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항상 잠재적 갈등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
  -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 항상 한반도가 외세의 침탈을 당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
  - 한·미·일 삼각 안보진영에서 탈피하여 미일동맹과 북·중·러 삼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자는 발상임.
  
- 동북아 균형자론의 배경은 최근 점증하는 중일 갈등과 경쟁이 동북아에서 불안을 초래할지도 모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임.
  - 미국과 일본이 한 덩어리가 되어 중국 및 북한과 대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균형자론의 골간으로, 특히 핵심은 중국과 일본임.
  - 이 두 나라가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100년 전과 같은 국권상실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으며,
  - 현재와 같은 한미일 3각구조 속에 갇혀 있어서는 미래의 충돌 상황에 대비할 수 없고,
  - 그래서 다자안보 구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한미동맹이 현재의 질서라면 다자안보체제는 미래의 질서임.
  
- 한국이 이러한 균형자 역할을 추구하면 그 결과 주변국과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지역안보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인접국간 공동번영의 협력적 질서를 창출하는데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동북아 균형자론임.

### 2. 동북아 균형자론의 평가

- 이상과 같은 야심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균형자 개념은 많은 논란에 봉착해

있음. 주된 논란은 세 가지 논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균형자'의 개념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balancer'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
  -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자'의 개념이 '균형적 실용외교'의 개념에 입각한 실리 위주의 전략적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의문임.
  - 국제정치적으로 균형은 곧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의미하며, 참여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균형자' 혹은 '가치의 균형자'라는 개념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임.
  - 동북아 균형자는 주변국 갈등의 조정자(mediator, harmonizer), 평화협력의 촉진자(facilitator), 공동이익 증대의 주도자(initiator)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부수적 개념이 과연 힘이 주도하는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도 작용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둘째,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능력은 충분한가에 관한 논란이 있음.
  - 우리가 전통적인 하드파워에 입각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함.
  - 그렇다면 소프트파워의 영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관건인 바,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구분하고, 동북아 균형자가 소프트파워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제시됨.
  - 이렇게 볼 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세계 최강의 IT 기술력,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 등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관계에서 결정적인 국면에는 소프트파워보다는 하드파워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역내 전통적 평화세력으로서 우리나라가 지니는 '도덕적 정당성'이 '힘에 의한 정당성'보다 얼마나 결정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임.
  
- 셋째, 균형자 개념은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가에 관한 논란이 있음.
  - 균형자 개념은 기존의 한미동맹 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실상 균형자 개념이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은 현재 중요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중임.
  -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자 역할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요소가 있음.
  
- 이상의 논란을 종합해 볼 때 '동북아 균형자' 개념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지정학

적 고민을 반영한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 그리고 '가치와 인식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역량이나 영향력의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점, 즉 한국의 균형자로서의 역량을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데 있음.
  - 우리 경제력과 국방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힘의 비교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 현실임.
  -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그들은 한국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희망만으로 그 역할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조셉 S. 나이(Joseph S. Nye, Jr.) 교수가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에서 연성국력의 근거로 제시한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분한 소프트파워가 있는가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음.
  - 우리가 패배의식과 자기비하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여전히 중요함.
  
- 동북아 균형자론의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충실한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는 것임.
  - 그러나 동맹은 상대적인 것임. 한국이 미국에 대한 기대가 있듯이 미국 또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이 서로 조화되지 못할 경우 동맹관계에는 균열이 불가피함.
  - 균형자 역할을 통일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III. 북핵 시나리오와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한 한국의 역할

- 북핵 문제 해결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선결조건임. 북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북미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일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북핵 문제 전개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전략수립과 한국의 역할 모색은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 어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

- NSC 설명자료에서는 균형자 역할이 '평화'라는 가치지향적 대외전략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순응적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균형자론의 궁극적 지향점 중 하나는 동북아에서 진영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다자안보체제를 지향하자는 것임.
  - 현재의 6자회담 체제를 장기적으로 다자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임.
  - 그런 의미에서 균형자 역할과 북핵문제 해결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핵 관련 최근 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북한은 지난 1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함.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구소련제 SS-21의 개량형으로, 관성항법장치를 장착한 사정거리 100~12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짐.
  - 우리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주한미군이 옮겨갈 평택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의 의도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6자회담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는 데 있음.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다른 선택안'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음.
  - 조지프 디트리니 미 대북협상 전담 대사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문제는 물론 인권, 탄도미사일, 마약 밀매 등 북한의 모든 범죄 행위가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했음.
  - 부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임.
  - 그럼에도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음. 함북 길주에서는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도도 있음.
  - 급기야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핵 문제가 '중대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사태는 긴박한 것으로 보임.

## 1. 북핵 시나리오와 사태 전망

- 북핵 시나리오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다음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장 큰 시나리오 구분의 기준은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을 포함한 사태악화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대표되는 협상과정 재개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기로 함.

## 가. 북한 핵실험 강행 및 사태 악화

- 현재 미 정보당국과 한국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핵 보유에 있다고 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북한은 핵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음.
  - 북한은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러 곳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함북 길주의 터널 공사 움직임에 근거하여 동 장소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꼽히고 있음.
  - 핵 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은 북한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음에 주목하고, 지난 2월 10일의 외무성 성명이 그러한 의도의 증거라고 보고 있음.
  - 반면 핵 실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의 협상력이 북한 핵 실체에 대한 모호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북한의 핵 실험은 그러한 모호성의 제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소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함.
  - 만일 북한의 목적이 핵 보유라면 핵 실험 강행이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 만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은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대신 사태는 매우 분명해질 것이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조를 통일 시키는 데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핵 실험 강행시 전망 가능한 사태전개로는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미·일 대북 경제제재 착수, 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통한 전방위 압박 개시, 인권·종교단체 등 국제 NGO들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요구 등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중국과 한국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기 어려워질 것임.
  
- 한국의 대응
  -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는 한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며, 향후 북한의 억지나 협박에 상시 시달려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태임.
  - 한국도 남북관계 단절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핵 불용 의지를 가져야 함. 이를 위해
  - 핵 실험 강행시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의 모든 활동을 전면중단해야 함. 핵 실험 후에도 정경분리 미명하에 교류협력을 계속한다면 북한에게 한국이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일시적이거나 남북관계의 전

면중단은 불가피함.

- 한국의 이러한 의도를 북한측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함.

#### 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후 북미 협상 재개

- 북한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6자회담에 극적으로 복귀하여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음.
  -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일단 북핵 사태의 추가 악화는 피할 수 있겠지만 회담 재개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만큼 지나긴 협상과정을 다시 겪어야 함.
  - 6자회담 복귀 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순히 파국의 시간만 연장되는 것일 뿐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태 악화로 진행될 것임.
- 한국의 대응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6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사태진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점점 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음.
  - 그동안 우리가 힘써온 국제공조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임.
  - 여하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할 때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만일 북한이 그러한 대타협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 북핵 대타협의 핵심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북한 경제회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길을 찾는 것임.
  - 한국형 대타협은 빅터 차(Victor D. Cha) 방식의 매과 포용과 오한런/모찌즈키(O'Hanlon & Mochizuki)의 대타협을 결합한 방식이 될 것임.
  - 이러한 대타협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기가 필요한데, 최소한 북한의 분명한 핵 포기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함.
  - 그런 다음에 현재의 경험규모를 뛰어넘는 지원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지원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그러한 대타협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햇볕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2. 북핵 시나리오에 따른 주변국의 반응

-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최근 체제변환(regime transformation)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급적 인내심을 발휘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부시 행정부의 선택지 중에 '북핵 용인'이라는 옵션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끝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대북 '압박 네트워크로 전환'한다는 입장임.
  - 장기적으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부시 취임사,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자유와 확산' 선언과 라이스 국무장관 청문회 발언에서 강조된 미국외교의 3대과제(민주주의 공동체의 단결, 민주주의 공동체의 강화, 자유와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산) 및 '폭정의 거점' 언급을 종합해 보면 북핵 문제는 북한의 자유문제로 성격이 재정의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임.
  -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태전개임. 인권과 민주주의는 북핵이나 탄도미사일 문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체제의 성격에 관련된 어젠다로서 북한에 대한 압박정도가 더 심해질 것임.
  -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경우와는 다르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즉,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북한 목조르기에 돌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됨.
- 일본은 대체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태를 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일본도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크게 팽배할 것임.
  - 현재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과 기술력, 비축된 플루토늄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조기 핵무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중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실패로 비쳐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본의 핵무장 구실을 제공하고, 대만까지도 핵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임.
  -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중국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압박하면 북한이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외교의 실패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이 불

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위에서 논한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을 불용하는 동시에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면서도 현재 북핵 문제의 구도는 한국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임. 한국으로서는 일단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소진하도록 미국과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함.
  
- 첫째, 북한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모든 안보전략의 기초임. 남북화해협력의 성과에 도취되어 그 이면에 있는 군사적 위협을 외면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 오류임.
  -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및 생산을 거의 자력으로 진행하면서 중동 지역과 같은 불안정 지역에 미사일 완제품 및 기술을 확산시켜온 대표적 국가임.
  -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 열도 상당부분을 사정거리 안에 포함하고 있음.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의 충격과 경악을 상기하면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됨.
  -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경계해야 함.
  
- 둘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 이제 우리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었음. 북한이 기어코 핵개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남북관계에 중대한 기로가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함.
  -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핵과 더불어 망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주지시켜야 함.
  
- 셋째, 동북아 균형자 개념에 부합하려면 한국의 역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 동북아 지역에 다자안보대화체를 창설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해야 함.
- 정부가 기존에 천명했듯이 6지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1.5 트랙 성격의 모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 자체는 동북아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므로 동북아 지역의 표면적 갈등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공통의 이익, 즉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다자안보대화체 창설에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도록 해야 함.

#### IV. 결론

- 동북아 균형자 개념은 새로운 전략개념임. 이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려면 정부 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천명에 있어서 몇 가지 혼선이 엿보이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동북아 경제중심’, ‘협력적 자주국방’ 등 개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음.
  - 안보전략 수립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개념 정립은 중요함.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해야 할 부분임.
-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간다면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조만간 핵과 미사일 모두를 가진 북한을 보게 될지도 모름.
  - 그것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악몽임. 그 악몽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소진해야 함.
  - 북한 핵 보유 저지는 동북아 균형자론 최대의 시험대가 될 것임.
- 지금이야말로 한국 외교정책이 최대의 시험을 맞는 시기임. 한국사회는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음.
  - 안으로는 세대변화와 가치관 변화로 인한 국내정치의 지형 변화, 밖으로는 북핵 문제, 한미동맹 조정 등 중요한 안보 어젠다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이럴 때일수록 균형적 실용외교의 정신에 투철해야 함. 불필요한 논쟁이나 마찰을 야기하는 선언적 외교보다 조용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에 주력할 때임.

- 외교안보 정책에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매우 중요함.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 스타일은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화두를 툭 던지고 나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따르고 결국은 정부의 의도대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음.
- 결과적으로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 정부의 의도는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함.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교안보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